대한민국 에너지 주권 거점 '신안 해상풍력'

특별기고

최미숙
전남도의원

필자는 7년 전 신안군의원으로 활동하며 전국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조례' 제정에 참여했다. 당시만 해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해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특히 전남지역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존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에 접어들었으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주권 실현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그 선봉에 신안군이 있다.

아시아 최대 클러스터 등 순항

신안군은 현재 아시아 최대 규모인 8.2GW 해상풍력 발전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조성 중이다. 특히 지난 4월 22일 정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서, 3.2GW 규모의 1단계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됐다. 총 48조원 이상 민간투자와 약 12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이 사업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을 넘어, 지역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이끄는 촉매제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으며, 이중 해상풍력은 14GW를 차지한다. 신안 해상풍력 클러스터는 이 국가계획의 핵심으로, 신안군은 연중 양질의 풍황과 얕은 수심 등으로 국내 해상풍력의 최적지이자 거점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신안군은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햇빛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태양광 발전 수익의 약 30%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자은도 해역에서 100M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바람연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3.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본격 가동되면, 주민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바람연금'이 지급되고, 주민복지와 마을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모델은 전국 각지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단순한 발전사업을 넘어, 기자재 생산·운송·유지보수 등 풍력산업 전 주기 클러스터를 지역에 집약함으로써, 전남지역이 직면한 인구소멸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는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물론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은 환경적, 기술적 고려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해양생태계 보전, 철새 이동 경로 보호, 어업권 갈등 해소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또한 정밀한 환경영향평가(EIA)와 생태복원 계획, 업계의 기술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이러한 문제해결이 한결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된 전력을 육상전력망과 연계하기 위한 공동접속 설비와 계통보강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풍력발전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장치(ESS)와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통해 보완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그린 수소클러스터로의 확장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신안군은 201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위해 주민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제도를 추진해왔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햇빛아동수당', '햇빛아동적금'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시행 중이다. 또한 1,00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군민투자 펀드'는 지역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공동주체로서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민간·지역 함께 나서야

이러한 제도는 지역소멸과 청년이탈 이라는 전남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설계하는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기반을 확산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신안 해상풍력 발전 클러스터는 단순한 발전 인프라를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주권 실현의 시금석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실험장이 될 것이다. 바다와 바람의 힘을 통해 우리는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제 중앙정부, 민간, 지역사회가 함께 이 전환의 항해에 나서야 할 때다. 전남 신안군의 바람이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움직이는 지속 가능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고

소방시설 설치, 화재 예방의 첫걸음

김영일
광주소방본부 화재예방과장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화재는 설마 하는 순간에 찾아온다" 실제로 많은 주택 화재는 불이 날 줄 몰랐던 평범한 하루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화재 예방의 첫 걸음은 늘 준비이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준비는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사실을 초기에 인지하여 경보함으로써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고 소화기는 초기 진압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 장비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2025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2012년 2월 4일 이전에 지어진 주택 중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1만 4,000여 가구이다. 가구당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2개를 기본 세트로 구성해 직접 방문 설치하거나, 거주자의 요청이 있으면 택배로도 전달한다.

화재는 1분이 골든타임이다. 그 1분을 지켜주는 건 거창한 장비가 아니다. 천장 벽에 붙은 감지기 하나, 현관 옆 소화기 하나면 충분하다. 이제는 '설마'가 아니라, '설치'가 필요한 때다.

이번 보급 사업에는 기간제 근로자 24명으로 구성된 시민 설치단이 함께한다. 보급 전 제품 작동 점검은 물론, 적정 위치 선정과 사용법 안내까지 꼼꼼하게 챙긴다. 거주자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비대면 설치도 가능하도록 설치 동영상 제공과 설치 전·후 사진 확인 시스템도 운영한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집이 곧 광주의 안전 거점이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 댁에 갈 때, 꽃과 함께 소화기 한 대와 감지기 두 개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 사랑은 불씨가 아니라 안전에서 피어난다. 실제로 감지기 한 개로 인명 피해를 막은 사례도 적지 않다. 작지만 강한 이 장비들이 화재를 막고 생명을 지킨다.

시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법으로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설마 하지 말고 지금 확인해야 한다. 우리 집에도 소화기와 감지기가 있는지, 혹시 오래돼서 교체가 필요한 건 아닌지, 직접 살피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예방정책을 펼칠 것이다. 안전은 대단한 일보다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하며, 그 시작은 늘 가정에서부터다. 불은 작을 때 끄는 것이고 예방은 설치할 때 시작된다.

소화기 하나, 감지기 둘. 작고 평범한 이 조합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올봄, 우리 집에도 가정의 행복 지킴이 '예방'을 설치하길 바란다.

독자투고

생명 위협하는 112 장난신고

경찰의 112 신고 시스템은 긴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이자 위기의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며, 경찰은 신속히 출동해 현장 상황에 맞춰 시민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인접 치안서비스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시민들이 이를 장난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악용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112 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 신고처리법) 등에 따르면,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이는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실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112 신고는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동시에 여러 건의 신고가 집중될 경우 경찰 인력은 한정적으로 출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112 신고 접수과정에 장난이나 허위신고가 끼어들면 실제로 발생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경찰력이 집중되기에 진짜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누군가는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실제로 과거 여러 사례에서도 허위신고로 인해 구조나 수사가 지연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다.

112 신고는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공공자원이다. 자신의 장난이나 순간의 분노로 이 시스템을 오용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기억하고 112는 오직 진짜 위급한 상황을 위해 남겨둬야 할 것이다.

노병준 함평경찰서 남부파출소장 경감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경남 주필 이종주 편집국장 박간재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정치부 (062) 720-1060 / 경제부 (062) 720-1067 / 사회부 (062) 720-1050 / 사회2부 (062) 720-1043
문화체육부 (062) 720-1071 / 사진부 (062) 720-1040 / 편집부 (062) 720-1073
사업국 (062) 720-1011 / 광고국 (062) 720-1016~17 / 관리국 (062) 720-1012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news@naver.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오월 정신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자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그 뜻을 기리는 행사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 17일 광주 동구 금남 공원 일대에서 열린 '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축제'인 전야제에는 토요일인 데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수만의 시민이 참가해 국민 통합의 한마당 축제로 진행됐다. '모든 이들의 광주', '승리의 오월', '새로운 세계의 빛'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야제는 시민 난장, 민주 평화 대행진, 오월 풍물굿, 대동 한마당, 심야 행사까지 광주 시민이 함께했다.

오전 11시부터 독립로~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진 시민 난장은 19080년 5월 광주의 저항 정신과 12·3 내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홍보, 전시, 먹거리, 판매,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는 5.18 유가족을 비롯해 제주 4.3항쟁, 부마항쟁, 일제 강점기 피해자는 물론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함께 참여해 전남대 광주역 조선대 북동 성당에서 출발한 민주 평화 대행진이 펼쳐졌다. 오후 7시께부터는 금남로 일대에 모여든 시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전야제가 시작되면서 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승리를 다짐했다. 18일에는 5·18민주묘지에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다.

국민 대통합 한마당 된 5·18

전야제 행사뿐 아니라 이번 제45주년 5·18에는 5월 18일을 전후로 광주 인권상 시상식, 민주 기사의 날, 5·18 청소년 문화제,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특별 전시, 사진으로 보는 5·18, 오월길 걷기 등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다채롭고 의미 깊은 행사와 전시, 공연 등이 펼쳐졌다. 본사 역시 지난 5월 10일 어린 학생과 학부모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대에서 광주역 중앙초등학교에 이르는 5·18 사적지 걷기 대회를 열어 5월 대동 행사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다. 오는 5월 24일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 광장 일원에서 '제25회 5·18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5·18 45주년 기념행사는 5월 광주의 희생을 추모하고 기리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세대가 참여하고, 모든 국민을 통합하는 한마당이자 민주주의 승리의 축제로 진행돼 의미가 더욱 깊었다. 광주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5·18 45주년을 기념하는 국민 통합 한마당 행사가 열린 것이다.

희생과 나눔, 실천을 상징하는 오월 정신은 지난해 말 불법·위헌적인 계엄을 막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시킨 원동력이다. 80년 오월 총칼을 앞세운 전두환 신군부가 헌법을 짓밟고 국민을 겁박할 때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광주 시민의 저항과 희생이 민주주의를 지켰듯이 45년을 면면히 흘러 내려온 오월 정신이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 준동을 막은 것이다.

오월 정신은 어느 시기 어느 한 단면만을 관통하는 게 아니다. 도도히 이어져 온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이자 앞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완성하는 정수(精髓)다. 그래서 오월 정신은 우리가 피 흘려 지켜 왔고, 지키고 있고, 반드시 지켜가야 할 가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위헌적인 비상계엄에서 목도 했듯이 오월 정신을 훼손하려는 일부 극우 세력과 불의한 권력자들은 지금도 온갖 수단을 동원해 오월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단호하게 대응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의 명령

하지만, 오월 정신을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도 여전히 많다. 발포 경위와 책임자 처벌 등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 광주 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이 수록을 찬성할 정도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지금이 적기다. 마침 광주를 찾은 주요 대선 후보들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만큼 새 정부에서는 이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민주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정의로운 정부여야 한다. 불법 위헌을 일삼아 헌법을 짓밟고 국민의 주권을 빼앗는 정부여서는 안 된다. 오월 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무리여서도 안 된다. 이번 대선이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투표장에 나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후보를 뽑아 불의한 세력들을 단죄해야 한다. 이게 오월 정신이다. 오월 정신이 민주주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함께 만들어 나가자.

사진 속 세상

주먹밥 만들어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제 45주년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이 열린 국립 5·18민주묘지 앞에서 참배객들에게 줄 주먹밥을 만들고 있다.

김태규 기자